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발표 ‘디지털 영토 확장, 디지털 주권 보장’ 으로 경제 도약 비전 제시

- 세계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영토 확장해 ‘디지털 패권국가’ 로의 도약 기회로
- 디지털 전환성장 3대 전략 제시 △디지털 영토 확장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넓혀 산업·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 총 135조 원 투자, 200만 일자리 창출, 매년 30조 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오전 ‘디지털 전환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성장’ 은 앞서 발표한 ‘에너지 전환성장’ 과 더불어 이 후보가 제시하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 의 핵심 축이다.

발표문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진단,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환 추세, 향후 디지털 패권 선점에 필요한 대책 제시 외에도 투자 규모, 일자리 창출, 기대 부가가치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디지털 영토 확장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 확장으로 산업·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이다.

각 전략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전략에서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등 물적 인프라 구축에 이어 빅데이터의 클라우드 방식 공유, 차세대 통신 기술로 ‘디지털 고속도로’ 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시스템 구축,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지원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CDO(Chief Data

Officer) 임명과 권한 부여, ‘대전환 펀드’ 조성으로 민간 투자 기회 극대화 등 방안도 담겼다. 또한, 교육역량 배출과 공공 데이터의 공개 확대 등도 포함됐다.

두 번째 전략에는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 집중 투자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디지털 부문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등도 공약했다.

세 번째 전략에서는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이 눈에 띈다.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에서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지켜지는 이른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겠다는 대목이다.

플랫폼 노동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리와 성장 기회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ID 탈취 등 사이버 공격과 해킹 대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일상의 디지털 사기 근절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위협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다.

이 후보 측은 이상의 3대 전략에 각각 30조 원, 40조 원, 15조 원 등 총 85조 원의 국비 투자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유치 30조 원을 더해 총 135조 원 규모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 원 유발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 부가가치 창출 등도 예측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소확행 공약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오토바이 앞번호판 부착 및 소음규제, 타투 합법화, 청년 면접 지원,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등 실생활과 밀착된 여러 분야의 공약이 담겼다.

(끝)